

會 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漁 港 消 息

발행경 孫 井 植 特 殊 韓 國 漁 港 協 會
 편집인 孫 井 植 法 人
 인쇄인 金 在 克 서울특별시종로구원남동103번지
 ISSN 1227-7053 TEL. 3673-2851~4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568-6651~2
 FAX. 568-6653

17개항 신규지정 제1·3종어항 105개로 늘어

1종 11개·3종 6개 어항 신규지정, 추자항은 지정해제

해양수산부는 올해안으로 인천광역시 소재 선진포항 등 17개항을 제1·3종어항으로 신규지정하는 한편 지난 2월 24일 연안항으로 지정된 추자항(제3종어항)은 어항지정을 해제할 계획이다.

따라서 1·3종어항이 89개에서 1백5개로 늘어나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항

지정 개발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어촌종합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어항기본시설 위주의 개발에서 교통 관광 유통 생활개선 등의 다기능 종합 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어항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1·3종어항의 신규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어항지정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를 실시한 결과 신규지정대상 46개 항을 연차적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올해는 제1종 11개항, 제3종 6개항 등 모두 17개항을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신규 제1종어항 지정대상항은 △공현진항(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공촌항(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리) △삼길포항(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남당항(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구시포항(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회진항(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여호항(전남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원전항(경남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심리) △대포항(경남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동암항(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하호항(제주 서귀포시 하호동)

건설이 한 귀퉁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진정으로 어항인들이 원하는 것은 어항예산이 일본만큼 큰폭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어항건설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인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는 역대 정권이 하도 불발탄을 많이 날린 데서 연유한다. 달콤한 공약을 수없이 내걸었지만 정작 투자자는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그친 적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편성된 새해 어항예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미한 증가율로 어항건설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결코 어항건설의 중요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어항인과 정부·국회의 상호 신뢰성을 회복하자는 뜻인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어항건설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미래의 우리나라 수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보다 과감한 어항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 자르듯이 과거 예산국회처럼 수치를 꺾어내는 데 끝까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오히려 후하게 늘릴 수도 있다는 달라진 모습의 국회의 선례가 이번 에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특히 서울·부산·대구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자에 허덕이며 파산의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는 지금, 이러한 어항건설 확충은 재정 자립도 향상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역 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기를 많은 어항인들은 갈구하고 있다.

1998년도 제1·3종 지정대상 어항

항 명	항 종 조 정		위 치
	당 초	지정계획	
선진포	제2종	제3종	인천시 용진군 대청면 대청리
공현진	"	제1종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공 촌	"	"	" 삼척시 근덕면 공촌리
삼길포	"	"	충남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남 당	"	"	"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구시포	"	"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회 진	"	"	전남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여 호	"	"	"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우이도	제2종	제3종	"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리
연 도	"	"	" 여수시 남면 연도리
도 장	"	"	" 완도군 금일읍 도장리
남 양	"	"	경북 울릉군 서면 남양리
원 전	"	제1종	경남 마산시 합포구 구산면 심리
대 포	"	"	"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동 암	소규모	"	"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호 두	제2종	제3종	" " 한산면 호호리
하 호	"	제1종	제주도 서귀포시 하호동
합 계	17개항 (제1종: 11개항, 제3종: 6개항)		

일본전국어항대회 孫 회장 초청참석

손정식 한국어항협회장은 일본전국어항협회장으로 부터 오는 10월 8일 일본 동경 국제포럼에서 개최되는 제50회 일본전국어항대회에 참석해 줄 것을 초청 받았다.

손 회장은 대회에 참석키 위해 10월 7일 출국, 대회 참가와 함께 주요 어항을 시찰하고 9일 귀국할 예정이다.

어항투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추경예산 200억원 24개 어항에 배정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해양수산부는 98년도 제2차추경예산편성에서 어항건설부문에 2백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계속투자항의 조기완공 촉진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항 등 총 24개항에 예산을 배정, 설계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고용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중소업체를 지원하고 가급적 전국에 걸쳐 균형있게 투자한다는 당초 방침에 따라 울도항 풍남항 등 계속투자 8개항에 시설비 79억원, 어유정항 외포항 등 16개항에 보수보강비 1백19억3천만원, 부대비로 1억2천만원을 배정하고 원칙적으로 이월없이

연내 준공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98 제2차 추가경정예산 항별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98 제2차 추가경정예산 항별배정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항 명	예 산	항 명	예 산
계속 투자 8개항	울 도	1,000	구조라	1,000
	풍 남	1,000	삼 덕	500
	초 도	1,000	매 물도	1,400
	남 도	1,000	오 산	1,000
	소 계 : 7,900			
보수 보강 16개항	어유정	50	감포	900
	외 포	1,220	모슬포	900
	농 양	380	오 친	900
	방어진	1,250	안 흥	850
	정 자	300	내 발	1,000
	장 호	600	양 포	195
	계 마	1,480	국 동	800
	어란진	700	대 보	455
	소 계 : 11,980			
	부대비	120		
합 계 : 20,000				

즉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충하면 고용증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방중소업체도 일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일석이조, 또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전후 복구의 원동력을 어항건설에서 찾아 오늘날 세계 최대의 수산업국이 된 성공 사례가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다행히 98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어항건설 부문에 2백억원이 책정됨으로써 이에 대해 조금쯤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으나 총 8조원의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들어갈 4조원에 비하면 2백억원도 딱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님은 물론이다.

굳이 의미를 찾자면 어쩔거나 새정부가 들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영역에 어항

이건이 한 귀퉁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진정으로 어항인들이 원하는 것은 어항예산이 일본만큼 큰폭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어항건설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인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는 역대 정권이 하도 불발탄을 많이 날린 데서 연유한다. 달콤한 공약을 수없이 내걸었지만 정작 투자자는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그친 적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편성된 새해 어항예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미한 증가율로 어항건설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결코 어항건설의 중요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어항인과 정부·국회의 상호 신뢰성을 회복하자는 뜻인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어항건설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미래의 우리나라 수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보다 과감한 어항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 자르듯이 과거 예산국회처럼 수치를 꺾어내는 데 끝까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오히려 후하게 늘릴 수도 있다는 달라진 모습의 국회의 선례가 이번 에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특히 서울·부산·대구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자에 허덕이며 파산의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는 지금, 이러한 어항건설 확충은 재정 자립도 향상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역 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기를 많은 어항인들은 갈구하고 있다.

이건이 한 귀퉁이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진정으로 어항인들이 원하는 것은 어항예산이 일본만큼 큰폭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어항건설이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인식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는 역대 정권이 하도 불발탄을 많이 날린 데서 연유한다. 달콤한 공약을 수없이 내걸었지만 정작 투자자는 말 그대로 생색내기에 그친 적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편성된 새해 어항예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경미한 증가율로 어항건설 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이 결코 어항건설의 중요성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이 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예산을 요구함으로써 어항인과 정부·국회의 상호 신뢰성을 회복하자는 뜻인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어항건설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미래의 우리나라 수산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중요성이 인식된다면 보다 과감한 어항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 자르듯이 과거 예산국회처럼 수치를 꺾어내는 데 끝까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오히려 후하게 늘릴 수도 있다는 달라진 모습의 국회의 선례가 이번 에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특히 서울·부산·대구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자에 허덕이며 파산의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는 지금, 이러한 어항건설 확충은 재정 자립도 향상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지역 경제와 국가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기를 많은 어항인들은 갈구하고 있다.

동

정

수산관련 업·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

▲김선길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3일 수산관련 업·단체장을 초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 5일에는 해양 해운 안전분야 업·단체장을 초청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 8일에는 국립수산물검사를 방문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관련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9월3일 해양수산부장관 초청 수산관련 업·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11일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행정규제개혁위원회회의에 참석, 16일에는 호텔신라 연빈관에서 열린 한·바다 최고경영자 조찬모임에 참석, 16, 17 양일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연찬회에 참석, 23일에는 올림픽제1체육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8기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박종식 수협중앙회장은 9월3일부터 7일간 일본 후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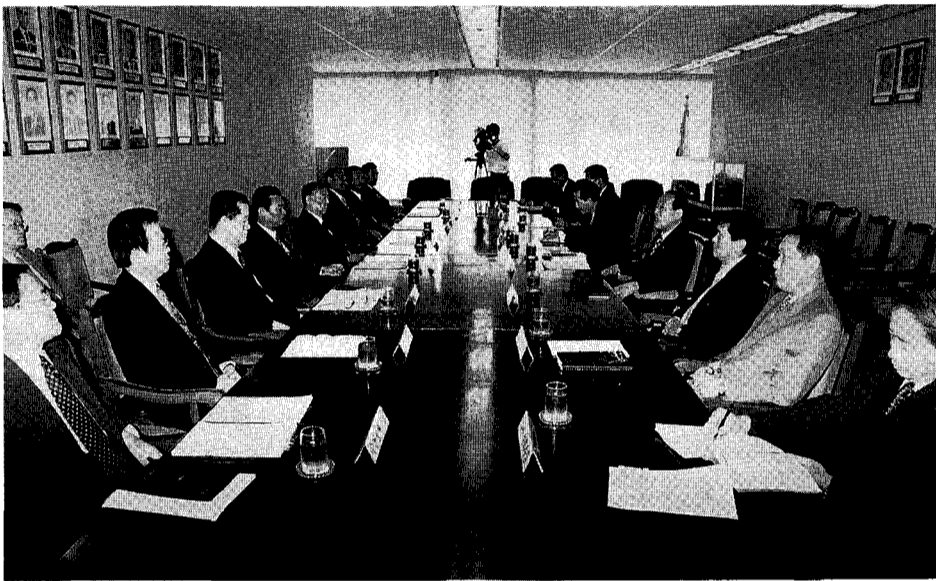
오카에서 열린 제3회 한일 민간어업 의견교환회에 참석차 출장.

▲안성봉 한국선박안전기술원장은 9월5일 해양수산부장관 초청 해양 해운 안전분야 업·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최상욱 남화도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2일 우정의 사절단 광주클럽 모임에 참석, 3일에는 전국문화연합회 긴급이사회겸 시도 지회장 연석회의에 참석, 9일에는 실직자 쉼터 개실 현판식에 참석, 10일에는 제2회 무안 연꽃대축제에 참석, 11일에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참석, 17일에는 서울올림픽 개최 10주년 기념식에 참석, 23일에는 올림픽제1체육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8기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24일에는 제26회 남도문화제에 참석, 25일에는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79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9월9일에는 실직자 쉼터 개실 현판식에 참석, 15일에는 법무부 선도보호위원 운영위원회에 참석, 25일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지난 3일 해양수산부장관 초청 수산관련 업·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전략적 집중지원 방식으로 수산예산의 구조를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는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79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 26일에는 무등산구락부 친선골프대회를 주관.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9월9일 서울법대 운영위원회에 참석, 10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세미나에 참석, 16일에는 전경연 조찬세미나 및 회장선임 임시총회에 참석, 25일에는 한국농률협회 주관 김종필 국무총리 초청 간담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7일 이수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광주지역순방 간담회에 참석, 9일에는 경찰청 치안자문회의에 참석, 16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임명장을 받음, 22일에는 건설공제조

합자문회의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9일 진도 공사현장에 출장.

▲장정언 정한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9월3일 제주도 4개 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장단회의를 주재, 9일에는 선도보호위원 소년선도분과위원회 회장단회의에 참석, 16일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임명장을 받음, 23일에는 올림픽제1체육관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8기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

▲송재성 주식회사성호종합건설 회장은 9월8일 여수 공사현장에 출장.

책국장을 전무로 발령했다.

주소 변경

▲주식회사대아건설 (대표이사 이정균)은 최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29번지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번호 : (062) 223-9614 ~ 8, 팩스 : (062) 223-9619.

▲고제철씨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는 최근 광주시 일곡동 862-1번지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심영씨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어항공사과장)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3동 197번지 정든마을 우성아파트 405동 2301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인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장 김영성 △해양수산부 이갑숙 □과장급 <부이사관 승진> △국제기구담당관 최장현 △국

제협력담당관 박덕배 <전보> △공보담당관 류상정 △해양수산공무원교육원 교학과장 김승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이홍식 △주영국대사관 해양수산관 김영석 □서기관 승진 △유통가공과 이상남 △어업지도과 성기만 강평현 △해양개발과 현기진 △국립해양조사원 해도과 김

동수 ▲한국선박안전기술원은 9월 1일 이광수 전 해양수산부 선박안전과장을 기술본부장으로 발령했다.

▲한국원어업협회는 9월1일 김민중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

외속

▲김규룡씨 (영진건설주식회사 사장)의 딸 수영 양이 지난 6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전우회관에서 화촉을 밝혔다.

▲김봉운씨 (본회 어항청소선 어항904호 기관장)는 지난 13일 여수시 여서동 명가에 식장에서 화촉을 밝혔다.

외비남부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단체
- ▲성보건설산업주식회사(사장 박성태)
- ▲주식회사삼건사(회장 정덕용)
- ▲영진건설주식회사(사장 김규룡)
- ▲신우건설주식회사(사장 김철화)

책임감리 100억 이상으로 축소

용역입찰 적격자수 제한도 폐지

내년부터 책임감리대상공사가 1백억원 이상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적격자수 제한이 폐지돼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최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주요골자로 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현재 공항, 항만, 철도 등 주요 22개 공종의 50억원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1백억원 이상 공사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건설기술용역의 PQ시 지급은 5~7개사를 적격업체로 선정, 이들에게만 입찰참여 기회를 줬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 PQ를 통과한 용역업체는 모두 입찰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감리회사의 등록 신청 등 서류처리기간을 단축, 절차 간소화를 도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또 신시도와 무너도 선유도 일대 해안 25만평에 대해 해안 매립도 추진된다.

전북도는 국토 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군산시로 하여금 오는 10월까지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도와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또 해안 매립지는 전북도가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새만금 사업에 포함된 매립 예정지의 허가를 취소하고 관광지 조성에 필요한 최소 면적만을 새로운 매립 예정지로 올해 말까지 매립지 변경 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토 이용계획 변경 및 해안 매립허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년 말까지의 환경 및 교통, 재해영향 평가를 포함한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06년까지 민자 1조3천억원과 공공자금 2천1백억원 등 1조5천억원을 투자, 선유도 일대 1백57만평에 카지노와 컨벤션센터, 콘도미니엄, 수상레포츠 시설, 마린나 등 관광시설을 갖춘 대규모 사업이다.

PQ공사 입찰참가폭 확대

조달청이 최근 재경부가 경쟁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회계예규를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결과 종합평점 60점 이상을 얻은 업체는 모두 적격자로 선정돼 당해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동수급체에 2등급 이하의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했을 경우 각 심사분야에서 12%까지 점수가 가산된다.

조사설계비 예산확대 절실

용역업체는 국가기반시설의 품질확보 등을 위해 충분한 기간확보와 예산반영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근 관련업체에 따르면 부실공사와 기술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등 용역발주가 충분히 집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99년도 예산편성 때 1천5백억원 등 총 3천5백억원의 설계용역비가 확보돼야 한다고 기획예산위에 건의했다.

또한 건설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의 착수단계인 조사설계가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립지 용도변경 20년까지 제한

해양수산부 관련법개정안 마련

앞으로 토지로 준공된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변경 제한기간이 지금의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또 매립지소유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에 해당하는 매립지를 국가에 무상으로 헌납해야 매립목적 변경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개별

등 공유수면매립으로 해양환경 파괴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매립지의 용도변경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립지소유자 임의로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제기되는 특혜시비 해소를 위해 용도변경 제한기간을 준공인가일로부터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댄 과징금 부과

공정위 기준개정... 작년 4월 이후 거래 적용

앞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등 건설공사의 하도급거래 때 불공정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물게 된다.

특히 공정위의 직권실태 조사결과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범위반금액비율과 과거 위반실적 등을 감안, 정액과징금이 책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상 과징금부과기준 개정안을 확정, 작년 4월 이후 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건설공

사의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중전 시정 명령을 내리던 것을 위반내용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반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위반행위가 모두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반금액 합계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범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자진시정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산출과징금액의 50%를 경감기로 했다.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2006년까지 민자 1조3천억 포함 1조5천억 투입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는 군산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 이용계획 변경절차에 착수하는 등 관광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국토 이용계획 변경은 군

산시 옥도면 신시도와 무너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일대 1백57만평을 본격적인 개발에 대비,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작업이다.

이에따라 5개 섬지역 일대 1백17만평의 농림 및 준농림 지역이 운동 및 휴양시설 설치 가능한 준도시 지역으

전략적 집중지원 방식으로 수산예산 구조전환 필요

작고 강한 정부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 발전시켜야

손정식 회장 해양수산부장관 초청간담회서 강조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지난 3일 해양수산부장관 초청 수산관련 업·단체장 간담회에 참석, 전략적 집중지원 방식으로 수산예산의 구조를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정식 회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잡화점식의 개별적 평형적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전략적 집중지원 방식으로 예산구조를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개발년대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불균형 경제성장 모델을 채택했

듯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SOC부분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인프라 구축 부분의 예산을 확대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는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 제1의 수산대국인 일본의 경우 수산업 기반시설인 어항건설에 수산예산의 62% 이상을 수십년간 투자해 오고 있음을 예시, 우리나라는 올해 어항 예산이 16.7%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또 과거 우리 정부의 수산정책은 증산과 어민소득증대 위주로 일관해 왔으나 지금은 국민식량 차원에서 고급단백질의 안정적인 고도이용과 효율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업구조조정이란 말은 어업재편, 어업정비, 감척대책 등으로 용어를 세분화 구체화하여 차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업구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어업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정부가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손 회장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수산청 발족당시에 나온 것으로 30년 이상되어 진부한 감이 있으므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손정식 회장은 "작고 강한 정부를 위해서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역설, 정부는 고도의 정책적 기능을 담당하고, 상당부분의 정부역할은 산하단체에 대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예컨대, 인공어초 사업과 어항공사의 설계 감리업무 등은 한국어합협회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 모슬포 덕적도항 어항시설 확장 등

어항정비계획 수립 추진키로

해양수산부는 기본시설이 완성됐으나 항여건 변화와 시설이 노후된 정자, 모슬포, 덕적도항 등 3개 어항에 대해 시설을 확장하는 등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항의 기본시설 완성후 장기간이 경과되고 항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이용 어선의 증가와 대형화로 기존시설이 부족, 어항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노후된 시설의 피해발생 우려가 있어 정자항 등 3개항에 대한 용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자·모슬포항은 기본시설 완성후 어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에따라 이선 이용 증가 및 대형화로 물량장 시설이 절대부족, 체선에 따른 극심한 혼잡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긴급대피항으로서 어구건조 및 수선 등 중간기 지역활을 담당하는 덕적도항은 방파제 시설은 완료되었으나 물량장 시설과 어항부지가 전무하여 이용 어선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따라 정자항의 물량장 시설 확보와 노후방파제 보강 및 정온수역을 확대할 계획이며, 모슬포항에 대해서는 물량장 시설 확장과 함께 준설 및 압초구역 정비하여 어선의

안전수용과 이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덕적도항의 경우는 물량장과 어항부지를 확보하여 이용어선의 편의를 제공하고 방파제 취약구간을 보강,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공어초시설 우수 시·도 표창

해양수산부 전국 실태조사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부터 26일까지 전국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인공어초 시설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협의회 운영 및 시설계획 등 사업준비 △실명제, 부실제작어초, 담수원 확보 등 어초제작 △감독관 상주, 시설입회 여부 등 공사감독 △사후관리부 작성, 폐어망 및 오폐물 수거 등 사후관리 실태 △자체예산에 의한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점검한다.

점검 평가 방법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당해년도의 사업을 평가하되 사업

순기상 평가불가능 항목은 전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공현장 점검은 시·도별 어초제작장 중에서 해

수상레저안전법제정

수상레저활동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동력 수상레저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민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레저활동의 다양화로 수상레저인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이로 인

당 점검반이 임의로 선정, 불시에 점검한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평가 결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토록 하는 한편 우수 시·도는 연말 포상계획에 반영하는 동시에 내년도 예산배정시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상레저기구의 관리 및 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의 부재로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레저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레저질서의 확립을 위한 수상레저안전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를 내수면 및 해수면으로 하고 대상을 동력레

소규모 공사도 설계 시공 일괄입찰이 유리 日 토목학회, 리스크방지·효율화 이점 커

일본 토목학회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소규모 건설공사에까지 확대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적 시행과 비용절감차원에서 유리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건설사업에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을 도입방향을 확정하는 바 있는 건설성은 앞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본 뒤 효과를 평가하며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인데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토목학회는 건설성과 도로공단이 연구위탁한 '설계·시공기술의 일체적 활용방식의 공공공사 적용성'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설계·시공 분리발주방식의 도입과 관련, 유럽 각국에서 시행중인 디자인빌드(DB)방식과 같은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을 도입했을 경우의 이점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중앙건설심의회는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을 새로운 입찰·계약방식의 하나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설성에 제안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공공건설공사는 설계·시공 분리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도입해야 한다'는 주석을 달았다.

이에따라 건설성과 도로공단은 토목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학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계·시공 일괄발주방식 도입시 장단점을 정리한 것이다.

토목학회의 보고서는 유럽의 DB방식은 발주자의 리스크 회피 및 사업효율화 관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비용절감 효과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일본이 새로운 입찰계약방식을 도입함에 있어 비용절감 효과만을 우선시할 경우 품질확보가 소홀해지거나 초기단계에서 설계 기준이 모호해져 건조물이 완성됐을 때 시공주가 만족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새로운 입찰계약방식의 적용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로 △설계초기단계에서 시공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프로젝트 △성능·기능·가격에서 유사한 복수의 시공방법이나 부재제조기술이 존재하는 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기술인력이 한정돼 있는 사업체가 발주하는 프로젝트 △재해 복구 등 사업의 조기완수에 우선도가 있는 프로젝트 △공유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 설계 프로젝트 등 5가지를 들고 있다.

또 책임분담 명확화 등의 과제가 선행돼야 하며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사에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대규모 프로젝트는 건설회사가 비공식 설계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효과가 있고 소규모공사에서도 과거의 유사공사가 반복되고 있는 경우 설계내용이 정형화되기 때문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같은 유럽의 방식을 일본에 도입·시행키 위해서는 책임분담을 공평히 해 보증에 관한 법제도 및 보험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보상책임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당사자간에 충분히 협의하는 체제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기구조 하여 면허는 레저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1급레저면허와 일반인이 가져야 하는 2급면허로 구분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레저객의 피해보전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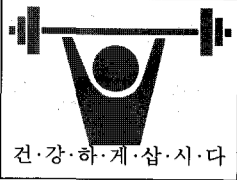
앞서가는 기술로 활력있고 쾌적한 漁港漁村건설

(株)대영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7-3
TEL : 556-4227, 556-0736~8 FAX : 553-6123

專門分野 : 港灣 및 海岸

- 國內外 港灣의 開發, 整備 및 建設을 위한 設計 調査 實施設計 및 施工監理 技術用役
- 第 1·2·3種 漁港의 開發 施設計劃 調査 實施設計 技術用役 및 기타 技術諮問
- 一般土木建設事業의 計劃 調査 設計 및 施工監理 技術用役
- 建設工事의 先進技術導入 新工法開發研究 技術指導 및 諮問用役
- 建設事業에 隨伴된 각종 機資材의 調達에 관한 技術用役
- 造船 施設 計劃



가을철 건강관리

일교차 심할때 감기조심
외출후 개인위생 철저히

기온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자칫 방심하다가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기가 쉽다.

어떤 질병이든 인체에서 발병을 하려면 자연환경과 인체와 균주와의 평형이 망가짐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가을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많은 해충이 생겨나고 적합한 환경에 이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짐으로 해서 더욱 많은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감기와 같은 원치않은 불청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감기는 기온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여 후두부위 이상의 호흡기 구조에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상기도 감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다시 부위에 따라 편도선염, 인두염, 후두염 등으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감기의 증상으로는 콧물, 기침, 두통이 있다가 고열과 전신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음식물을 삼키기가 곤란해지는 인두염 그리고 목이 쉬는 후두염까지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은 대개의 경우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스스로 회복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감기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세균에 의한 이차 감염이 생긴 경우에 한해서 항생제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상기도 감염 즉 감기의 예방이나 치료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법은 감염된 환자를 멀리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가족이나 집단 내에 환자가 있을 때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외출 후에는 손을 잘 씻으며 양치질을 열심히 하여야 한다.

감기는 감기 자체보다는 감기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흔한 합병증으로는 폐렴, 중이염, 만성기관지염의 악화, 천식의 악화, 중추신경계나 심혈관계로의 감염의 파급 등을 들 수가 있다. 이러한 심각한 후유증이 생기기 전에 적절하게 감기를 치료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을철에 흔한 질환 중의 하나로 유행성 근육통이 있다. 이 질환은 이유없이 갑자기 온몸이 저리며 아프고 가슴·복부·어깨에 심한 통증이 있다. 두통이 동반되고 열이 재발성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병은 약 9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는다.

이외에 일본뇌염도 계절적으로 가을철에 발생하는 일종의 계절병이다. 또 늦가을에 유행하는 질환으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을 몹시 당황하게 하는 질환 중의 하나인 가성콜레라라 있다. 이는 설사를 수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탈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분과 전해질의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유행 시기에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인근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9) 운 반
준설 토사는 토운선으로 운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심이 얇은 장소의 준설에 있어서는 태선에 틀을 장착한 개랑선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거트선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거나 태선이 통상 이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준설토의 적재는 선박의 안정이 유지되도록 한쪽에만 짐을 싣지 않도록 주의한다.

저개상운선을 사용할 경우는 토사 후 해치를 닫고 항행하지 않으면 해치에 부착한 버리다 남은 흙이 항행 중 떨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10) 투 기
투기에는 해상투기와 육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

준설토를 해상투기할 경우는 미리 결정된 구역으로 토운선을 끌어들이어서 하는데 투기장소가 좁거나 알을 경우에는 투기위치의 순서를 결정해 둔다.

투기장소에 오타방지막을 칠 경우, 해류의 영향으로 토운선의 출입구에서 오타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상황에 따라 토운선 출입구의 변경도 검토한다. 최근에는 오타방지막에 부침식이 있어 그 경우에는 출입구의 변경은 필요없다.

준설상을 양륙할 경우는 개랑태선과 같이 양륙용버킷식 기계가 작업할 수 있는 형식이 편리하다.

안벽에 접안하여 양륙할 때는 해중에 토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23]

第2章 浚渫工

(11) 오타방지를 폐기
오타방지틀을 철거해제한다.

(12) 준설완료 인입
발주자의 입회·확인검사 후, 그레브준설선을 근처의 박지로 끌어넣고, 회항준비를 한다.

(13) 오타방지막 철거
오타방지막을 철거·예항·양육·해체하여 운반(반출)한다(18.2 오타방지막공 참조).

(14) 회 항
(4) 회항에 준하여 소정의 계선기까지 회항한다.

2.4 백호우(back hoe)선 준설

2.4.1 개 설

백호우선 준설은 백호우식 준설선을 사용하는 준설이다. 백호우식 준설선은 토사에서 연암까지의 준설에 적응성이 높고, 준설 저면과 비탈면의 마무리 정밀도가 타 공법에 비하여 높아 최근에 그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준설깊이는 대형기계라 할지라도 수면하 10m정도로 한정된다.

백호우식 준설선(이하 「백호우선」이라 한다)은 태선에 육상기계의 백호우와 같은 기능을 지닌 기계를 탑재한 것으로서 버킷 용량도 0.7m³급에서 5m³급까지 있다. 태선에 육상기계의 백호우를 탑재하여 고정할 것도 사용되고 있다. 선체의 고정은 3개의 스퍼드(spud)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소형에서는 2개의 스퍼드나 앵커에 의하는 것도 있다.

백호우선은 준설선의 분류상 디퍼선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비된 버킷의 방향이 반대이다. 디퍼선은 자기에게 가까운쪽에서 앞으로 밀어내듯이 굴착하여 준설구역에 전진이동하는데 반하여, 백호우선은 전방에서 자기앞으로 끌어낼듯이 굴착하면서 준설구역에 후진이동한다.

백호우선은 선체고정을 스퍼드로 하기 때문에 앵커로 선체고정을 하는 그레브선과 비교하여 좁은 작업구역에서의 시공이 가능하고, 선체의 흘수도 그레브선보다 일반적으로 얇다.

백호우선의 버킷은 토질에 따라 네 다섯종류를 장비할 수 있다.

백호우선의 선체도, 버킷의 종류 및 버킷의 파쇄·굴착메카니즘을 그림 2.4.1, 그림 2.4.2, 그림 2.4.3에 도시하고, 백호우선의 표준적인 선체치수와 준설깊이를 표 2.4.1에 제시한다.

표 2.4.1 백호우선의 표준적인 선체치수 및 준설깊이

0.7m ³ 급	선체치수(총수)		준설깊이 (수면하) 5m
	6m × 15m × 1.2m (0.7)		
1.0m ³ "	7 × 18 × 1.5 (1.0)		5.5
1.5m ³ "	8 × 20 × 1.5 (1.0)		6.5
2.0m ³ "	9 × 24 × 2.0 (1.0)		7
3.0m ³ "	11 × 27 × 2.0 (1.0)		8.5
5.0m ³ "	15 × 30 × 2.5 (1.5)		10.0

98 세제 개정안 중 개인 세제 문답풀이

2억원짜리 집 살 때 稅 160만원 줄어

생활정보

생활정보

내년부터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부과되는 양도세율이 지금보다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또 상속·증여에 대한 합산과세기간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99년부터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세제 개편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됐다는데.

-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한도가 국내외 관계없이 150만원으로 통일된다. 지금은 국내 교육비는 전액, 국외 교육비는 연간 150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만 97년 현재 교육비 최고액은 중학교가 50만원, 고등학교가 104만원이므로 추가적인 세 부담은 제외된다.

국외에 간간 본인·자녀 등 부양 가족의 교육비를 계산할 때 비과세 장학금은 차감한다. 내년부터 국내 교육비도 비과세장학금을 뺀 금액이 공제금액이 된다.

▲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외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를 팔았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

-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에서 양도세를 내는 자산에 준해 세금을 매긴다. 외국부동산의 권리에 대해서는 1가구2주택 등 국내 양도세 과세기준을 적용,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20~40%의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주식·출자증권 등 외국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에도 2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차익 및 산출세액은 국내 자산 양도소득계산을 준용하되 외국은 기준시가 등의 개념이 없으므로 실질거래가액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양도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세한 과세방법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외국부동산 취득 및 양도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

-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외화를 매입해 외국에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을 거치게 돼 있다. 외국부동산 양도대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역시 한국은행을 통하게 되므로 자금출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양도세 과세에 나서게 되며 외국부동산 양도대금을 외국에 두면 외환관리규정 등을 위반하게 돼 처벌받는다.

▲등록세에 붙는 교육세와 취득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되면 부동산 거래단계 및 자동차 취득단계에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 2000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취득세분 농특세(0.2%)와 등록세분 교육세(0.6%)가 각각 폐지되므로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현행 5.8%보다 0.8%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2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세금이 160만원 줄어든다. 자동차를 취득할 때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분 농특세(0.2%)와 등록세분 교육세(1%)가 각각 폐지되므로 세금이 현행 8.2%보다 1.2%포인트 줄어든다.

▲담배와 경주마권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면 세부담이 커지고 가격이 인상되지 않나.

- 지금은 담배소비세액에 교육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세가 폐지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특별소비세로 거두게 되므로 세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다.

현재 경주마권세액에 대해 교육세 5%와 농특세 2%가 부과되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세와 농특세를 폐지하고 경주마권 발매금액에 대해 8%를 특별소비세로 부과하게 된다.

▲담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나.

- 부가세를 새로 부과하면 10%(현행 부가가치세율)에 해당하는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따라 현재 900~1300원인 국산담배는 990~1430원으로 90~130원이 오르고 1300~1600원인 외제담배는 1430~1760원으로 130~160원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그 동안 논란이 있어온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방식 대신에 '제한적' 포괄주의를 도입하기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행 열거주의 과세방식과 무엇이 다른가.

- 시시각각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세과세대상을 증여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원칙에 맞지 않고 위험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포괄주의로 가는 대신 현행 열거주의에 의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일부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 유형과 유사한 변칙적인 경제적 이익 등의 무상 이전에 대

해서는 지금처럼 직접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특수관계자간 경제적 이익 등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여의제 과세범위를 사실상 확대한 것이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첫 부과하기로 했다는데.

- 과세대상은 상장주식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3년 안에 전체 발행주식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해당되면 양도일(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양도세율과 특별부가세율 인하 내용(99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현행	개정(안)
* 2년이상 보유 (3년계)	3천만원 이하	30%	20%
	6천만원 이하	40%	30%
	6천만원 초과	50%	40%
* 2년미만 보유	미등기 양도	50%	40%
	비상장주식 (중소기업주식)	75%	65%
		20%	현행 유지
		(10%)	

<특별부가세율>

구분	현행	개정(안)
세율	20%	15%
* 미등기양도	40%	30%